

‘전국 1호’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누굴 뽑을까

강기정·김영록에 전현직 의원 등 후보군 9명 ‘새판 짜기’
조별리그 가능성에 합종연횡…청와대 출신 출마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1호 행정통합’ 후보자로 광주·전남에 힘을 실으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이 전제될 경우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따로 뽑던 기존 선거 구조는 사실상 사라지고,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는 ‘광주·전남 특별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

2월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통합단체장을 노리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군간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을 초청한 오찬간담회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특별시장(가칭) 통합선거 실시를 위한 여론수렴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 추진하자는 뜻을 보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당장 광주전남통합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15일까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원특별법안’을 제정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별법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민주당과 각 정당은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공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통합단체장 도전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만 광주 5명, 전남 4명 등 9명에 달한다.

광주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 의원(광주 광신울·2선), 문인 광주 북구청장,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초선), 이병훈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이 거론된다.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4선), 신정훈 의원(나주·화순·3선), 주철현 의원(여수갑·2선)이 후보군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후광’을 얻은 김

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참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실상 첫 선거에서 후보 1인이 광주·전남 초광역지역 지지를 오히려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광주·전남 후보간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초광역 선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후보는 일찌감치 출마를 재고할 수도 있다. 유권자 수는 약 275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선거운동 범위도 광주시 5개구와 전남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다. 조직과 자금, 인지도 모두를 갖추지 않으면 선거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부 후보가 중도에 출마를 접거나, 경선 단계에서 후보 간 단일화나 연대가 시도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기존 지역 기반 중심의 선거 방식보다, 광주·전남 전역에서 통할 수

있는 인물 경쟁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미 공표한 ‘역올한 것옳는 없다’는 방침에 따라 후보가 6명 이상인 만큼 경선도 조별리그 가능성이 높다.

조별리그 경선 룰에 따라 1~2차에서 차례로 낙마한 후보들이 이후 생존 후보 중 어떤 후보와 연대하느냐에 따라 판세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또 광주권과 전남 서부권, 전남 동부권 등 세 권역으로 크게 분류되는 광주·전남 정치지형상 ‘삼국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 정부 정책과의 호흡이 선거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반대로 인지도가 낮거나 지역 한

쪽에 기반이 치우친 후보들은 불리한 구도에 놓일 수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두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이후 처음 맞는 전혀 다른 선거”라는 말도 나온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행정체제로 선거를 치러온 지 40년 가까이 된 만큼, 통합단체장 선거는 지역 정치 지형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통합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선거 구도만 놓고 보면 이미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통합단체장 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광주·전남 정치 구조를 다시 짜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 대통합 합의문 발표…특별시 출범 급물살

재정 지원 등 6가지 합의
시민 공감대 확산 토론회도
“내달 특별법 통과해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 이후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최적의 통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총 6가지 항목이 담겼다. 우선 통합광역지방정부는 특별시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으며, 행정통합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 행정 권한 이양을 포함하기로 했다.

광주와 전남 무언에 있는 각 시·도청사는 그대로 존치하는 가운데 ‘통합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의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도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설치에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 의회와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권역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발표문을 읽은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별로 신속하게 개최하거나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도 꾸리기로 했다.

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 마련된 행정통합 관련 로드맵도 공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개 교육청과 함께 입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과들 함께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청회는 오는 15일로 열리며, 특례와 관련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는 15일 또는 16일로 계획 중이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오는 16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일정이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재정과 관련한 특례를 빠르게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2월 말까지는 반드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행정통합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

이 대통령과 간담회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의견 조율
“속도감 있게 추진”…시도민 설명회 통해 동의 구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주민 의사 확인 방식이 ‘주민 투표’ 대신 ‘의회 동의’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특별시장 통합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통합결의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는 주철현 의원 등이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철현 의원은 “주민자치법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20분의 1 이상이 서명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며 “의회 동의로 추진했다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질 경우 절차상 혼란이나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애초에 투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주민투표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도 의회의 의결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진욱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에서 시기적으로 지방선거까지 가는 동안 주민투표까지 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데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 같다”며 “시·도의회 의결로 행정통합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원은 “주민 의사가 광장적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계속 열고, 각 시·군·구와 지역 조직 단위에서도 적극적인 찬성 결의나 결의대회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대다수 의원이 의회 동의를 방식 추진에 동의했고, 대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각 시·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등은 조만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의회 동의 절차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전남시민단체 “시민참여 보장해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 확대와 시민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통합 논의가 정치권 주도로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속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고, 이 역시 통합 이후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통합 지방정부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해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의 구두 약속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는 남은 과제다. 향후 국회 논의가 예정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립의대 신설과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명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현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특례와 지원 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통합이 전남의 속원 사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에 기반한 최종 결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 광주·전남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행정통합이 어떻게 지역차별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자치분권의 획기적 강화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속도전과 정치적 시급성을 이유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현 상황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통합 논의가 시·도 단체장의 의지와 정치적 계산에 따라 하향식으로 급히 추진될 경우, 통합 이후 행정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역발전 전략으로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공론화, 시민의 직접적 의사

목포대와 통합 재투표 여부
순천대, 설문조사로 결정

목포대학교와의 통합에 반대 의견을 표출한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재투표 여부를 설문조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11일 순천대에 따르면 학생회 측은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12일 대학 통합과 관련해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문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재투표 실시에 대한 찬반을 전자투표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 의견이 많으면 학생회는 대학 측과 재투표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이뤄진 순천대와 목포대 교수, 직원, 학생 등 주체별 통합 찬반 투표에서는 순천대 학생 60.7%가 반대했다.

목포대에서는 세 주체 모두, 순천대에 서도 교수와 직원들은 찬성이 50%를 넘겼다. 순천대는 3개 직역 모두 찬성을 50% 이상을 기록할 경우에만 찬성으로 간주하기로 해 통합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반대로 판정했다. 김민수 기자 joinsu@

통합 이후에도 전남 현안은 계속 간다

국립의대·군공항 이전…이 대통령 “손해 없게 하겠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제기됐던 전남 핵심 현안의 동력 약화 우려가 일단 해소되는 분위기다.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등 전남의 장기 숙원 사업은 통합 이후에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면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으로 인해 전남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 설립 문제와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모두 통합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이어받아 추진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립의대 신설은 전남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필수·응

급의료 공백 문제가 구조적으로 반복돼 왔다. 전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국립의대 설립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고, 정부 역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국경과제에 국립의대 설립을 반영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전적 선언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광주와 통합할 경우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체’라는 상징적 명분이 약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국립의대 설립의 정책적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대통령에게 “의료 체계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전남에 국립의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 역시 비슷

한 맥락이다. 현재 이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에 대한 재정·정책적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고, 이 역시 통합 이후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통합 지방정부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해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의 구두 약속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는 남은 과제다. 향후 국회 논의가 예정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립의대 신설과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명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현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특례와 지원 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통합이 전남의 속원 사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